아시아나 균등감자 수세에… 금호家 '형제의 난' 재현되나

금호산업, 아시아나 경영난 책임회피 금호석화·소액주주에 피해 불가피

석화, 산은에 감자반대 문서 전달 균등감자에 대한 법적대응 안할 듯

아시아나항공이 균등감자 등으로 수 세에 몰린 가운데, 다시 박삼구·박찬구 회장 간의 갈등이 주목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 룹 박삼구 전 회장과 동생 금호석유화학그룹 박찬구 회장은 과거 '형제의난'을 겪었다. 2009년 7월 박삼구 전회장은 경영상 갈등으로 동생 박찬구 회장을 해임하며 자신도 경영에서 물러났다.

박찬구 회장이 그룹 양대 지주회사 중 하나인 금호산업 지분을 팔고 금호 석화 지분을 사들이면서 동일 지분 보 유의 전통이 깨졌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금호그룹에서 25년간 이어져 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

형제경영의 전통은 끊어진 바 있다. 이후에도 박삼구 전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서로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형제 간의 갈등은 이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다시 '형제의 난'이 격화될 가 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협의해 코 로나19로 악화한 결손금 보전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3 대 1의 비율로 균등 무상감자를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인 금호산업을 비롯 해 2대 주주 금호석화와 소액주주 등도 보유 주식 수가 동일하게 3분의 1로 줄 어들게 됐다. 금호산업이 잘못된 경영 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난을 심화시 켰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 이 나오는 이유다.

금호석화와소액주주는 내달 14일 열 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균등 무상 감자 안건이 통과될 경우 금전적 피해 가 불가피하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구조는 ▲금호산업 30.77% ▲금 호석유화학 11.02% ▲소액주주(1% 미 만) 58.20% 등이다.

균등무상감자가이뤄질경우금호석 화는 2459만3400주에서 819만7800주, 기타 주주는 1억2994만3831주에서 4331만4610주로 감소한다. 줄어드는 주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금도 함 께 소멸하는 것이다.

이에 금호석화는 아시아나에서 균등 무상감자를 결의하기 이전 산업은행에 이 같은 방식의 3 대 1 무상감자를 반대 한다는 뜻을 문서로 전달했다. 업계에 서 '형제의 난'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금호석화는 균등 무 상감자가 이뤄지더라도 법적 조처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시아나가경영난극복을위해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상황 에 대한 다각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뜻 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균등 무상감자에 반대해 여러 대응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한편실제 아시아나가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소액주주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의 승인 절차가 남아, 최종적으로 균등 무상감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추후 균등 무상감자 안건 이 부결될 경우, 차등감자가 대체안으 로 거론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LG 3분기 영업익 7671억··· 전년比116% 급증

코스피 상장사 LG는 연결 기준 올 해 3분기 영업이익이 7671억원으

로 지난해 동기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공시했다. 매출은 1조956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순이익은 7617억원으로 123% 늘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 가입자 1423만명… 2.6% 증가

〈전년대비〉

고용부, 10월 노동시장 동향 서비스업 가입자 984만명 4.2% ↑ 숙박·음식업 2.2만명… 감소폭 커져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 태 직전인 올해 2월 수준으로 회복했 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행정 부문 가입자는 급증한 반면, 사회적 거 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의 신호 로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노동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2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4000명(2.6%) 증가했다. 월별 증 가 폭을 보면 올해 2월(37만6000명) 수 준을 거의 회복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은 올해 3월 25만3000명으로 크게 떨어졌 고, 5월에는 15만5000명까지 내려앉았 으나 그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는 상태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는 서 비스업 가입자가 지난달 984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3000명(4.2%)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부문 가입자만 19만9000명 증가해 월별 증가 폭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공공행정 부문 가입자는 정부와 지자 체의 일자리 사업에 따른 것이다.

반면,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만2000명 감소해 감소 폭이 9월 (1만3000명)보다 커졌다. 지난8월 중순을 기점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의 고용 충격이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모양새다.

도매업 고용보험 가입자 역시 1만 2000명 줄었다. 반면 소매업은 홈쇼핑 등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라 1만6000명 늘었다.

국내 산업의 허리인 제조업의 고용 부진 역시 지속됐다. 제조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352만5000명으로 1 년 전보다 4만5000명(1.3%) 줄었다. 제 조업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9월 부터 13개월째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력 산업인 전자·통신업(-6000명), 자동차업(-8000명),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업(-7000명)모두고용보 험 가입자가 감소했다. 전자·통신업과 자동차업의 감소 폭은 9월보다는 축소 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금융위 "취약층 위한 서민금융 확대 고민"

>> 1면 '진퇴양난 금리정책'서 계속

이들 법안은 이달 중 하순에 개최될 2차 법안 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 다. 법안소위는 현재 진행하는 예산심 사가 끝나는 대로 열릴 예정이다.

◆인하 때마다 논란이 된 소급적용, 이 번에는

다만 금리인하를 추진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두고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 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서민들의 고금 리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소급적용을 추진하겠지만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익성 악화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 권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저금리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 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 로 고금리 대출을 진행해 소급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과 최고금리 초과시 금리를 자동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을 맺은 바었다. 즉 최고금리가 연 20%로 떨어지면 개정안에 따라 연 20%~2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연 20% 금리인하혜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자상 환을 1년간 유예한 상태에서 금리인하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저신용자의 피해로 이어질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보통 1~5년 주기로 만기가 도래한다. 대출을 취급해도 금리 인하율을 매번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연장 등의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경우거액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한번에돈을 갚기 어려워 오히려 불법 사금융이용이들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 인하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햇 살론 같은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정책패 키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신청자에만 제공

금감원,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내년부터 카드 현금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지 금은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 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가족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도 본인회원의 연체금을 가족회원에 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 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원에 대한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 할 예정이다.

먼저 표준약관에 가족카드 발급이나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새로 반영한다. 본인회원의 연체채무에 대해 가족회원 에게 부당한 추심을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족카드 발급 범위 등을 명시한다.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회원 가입(카드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 에만 이용토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생겨 카드 도난·분실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용심사 등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 하다

지금도 카드론 대출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확인 하지 않고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 많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